

보도시점 2024. 7. 19.(금) 11:00
< 7.20.(토) 조간 >

배포 2024. 7. 19.(금)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 출범 및 「무역구제제도 효과성 제고방안」 발표

- 22개 업종별 협·단체와 함께 우리 기업의 산업피해 대응 지원체계 구축
- 우회덤핑방지제도 시행, 대리인 한정 열람제도 도입 추진 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 대응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 협·단체 위주로 22개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를 구성하고, 7.19(금) 출범 간담회를 개최했다.

무역위원회는 기업들의 무역구제제도 활용 강화를 위해서 기존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에 산업피해 대응 기능을 추가하고 명칭도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변경하는 고시를 6.26(수) 개정하였다.

간담회에는 무역위원회 이재민 위원장, 천영길 상임위원과 지원센터 인사들이 참석하여 지원센터의 주요 임무와 역할, 무역위원회의 지원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지원센터의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무역구제제도 효과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역구제제도의 신속성 제고, 효과성 강화,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내년(‘25.1.1.)부터 우회덤핑방지제도 시행, ▲신속한 조사·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대리인 한정 열람제도’ 도입 검토, ▲산업피해구제수준 강화, ▲불공정무역행위 공표제도 개선 등을 담고 있다. (붙임 2 참조)

이재민 위원장은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의 출범으로 우리기업의 산업피해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지원센터들이 회원사들에 무역구제제도를 적극 소개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 “앞으로도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로부터 무역구제조치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진수 (044-203-5350)
		담당자	사무관	송수진 (044-203-5858)
			사무관	백숙자 (044-203-5848)

□ **간담회 개요**

- 일시, 장소 : '24.7.19(금) 14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 참석자 : (무역위) 이재민 위원장, 천영길 상임위원, 무역구제정책과장, 담당자 등 5명, (지원센터) 업무 담당자 30여 명
- 주요 내용 :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 개편방향 설명, 무역구제 효과성 제고방안 설명, 지원센터 의견·애로 청취

□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 목록**

기관명	산업분야 / 역할	기관명	산업분야 / 역할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시계	한국무역협회	무역경제·정책지원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소재·부품·기계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대한안경사협회	렌즈·안경테·선글라스	한국완구협회	완구 및 캐릭터
한국산업용재협회	기계공구 및 산업용품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온라인 쇼핑	한국문화콘텐츠 라이선싱협회	지식재산권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완구	한국전자정보통신 산업 진흥회	전자, IT
한국판유리창호협회	건축용 및 가공 판유리제품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한국베어링산업협회	베어링 및 관련 부속품	한국패션산업협회	의류 및 패션품목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대변
한국철강협회	철강재	한국로봇산업협회	로봇

< 추진 배경 >

- ◇ 글로벌 시장은 자국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 확산
- ◇ 국내시장도 중국산 저가제품의 수입 증가로 덤핑조사 신청 증가, 이차전자·바이오 등 첨단기술분야에서 특허권 분쟁 증가 추세
- ⇒ 보호무역주의 확산,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변화에 기민한 대응을 위해 「**무역구제제도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추진 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제

무역구제제도
① 신속성 제고

- ① 우회덤핑방지제도 시행
- ② 대리인 한정 열람제도 도입 검토
- ③ 특허 침해조사 협력체계 구축

② 효과성 강화

- ① 산업피해 구제수준 강화
- ② 덤핑마진률 산정방식 고도화
- ③ 불공정무역행위 공표제도 개선

③ 접근성 향상

- ①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확대 개편
- ② 무역구제 산학연 포럼 개최 정례화

④ 인프라 개선

- ① 조사관 전문성 강화 및 조사역량 확충
- ② 보조금 상계관세 조사 기반 구축
- ③ 기타 조사절차 및 운영 규정 정비

1. 무역구제제도 신속성 제고

□ (우회덤핑방지제도 시행) '25.1.1일 시행을 위한 세부 운영규정 마련

- (현황) 제도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관세법(56조의2 신설, '23.12.31), 시행령('24.2.29), 시행규칙('24.3.22)개정
- (주요내용) ▲조사신청·개시결정, ▲신청서·질의서 양식, ▲답변서 분석방법 등 신청·조사에 대한 세부 운영규정 마련

□ (대리인 한정 열람제도 도입 검토) 조사의 신속성,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영업비밀 쟁점에 대해 대리인에 한해 열람하는 제도 도입 검토

- (개념)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과정에서 무역위에 제출된 기업 영업비밀 자료를 상대방 대리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열람을 허용하는 제도
- (현황) 침해 판단 근거가 기업의 영업비밀인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무역위에 제출된 영업비밀은 상대측과 공유 불가
- (주요내용) 신속·정확한 판단, 방어권 보장, 영업비밀의 경쟁사 누설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리인 한정 열람 제도」 도입 방안 검토
* 제도 세부 내용 및 연구용역 완료('24.12월)
- (해외사례) 美 USITC AEO(Attorney Eyes Only), EU 데이터룸 제도 등

□ (특허침해조사 협력 체계 구축) 신속·정확한 판단을 위해 전문기관과 협력체계 강화

- (현황) 이차전자·바이오·신소재 등 고난도 첨단기술 분야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사건의 쟁점이 복잡다기화되고 분쟁이 대형화
- (주요내용) 첨단 장비·우수 연구인력 보유 연구기관(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대한변리사회 등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2. 무역구제제도 효과성 강화

□ (산업피해구제 수준 강화) 실질적 산업피해 완화를 위해 예비판정과 잠정조치의 패키지화, 덤핑방지관세 5년 부과 적극 검토

□ (덤핑률 산정 방식 고도화)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 사례를 통한 다양한 기법 도입 검토

- **(불공정무역행위 공표제도 개선)** 공표 매체·내용·게재 방식 등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 **(현황)** 표준문안, 글자크기(신문 등에 공표 시)만 제시하고 있어 공표요건 미흡
- **(주요내용)** 동종 또는 유사 피해방지 등 공표발령 요건, 공표명령 이행을 위한 표준양식 및 규격제시, 통지의 소명 기회·공표절차 중지 등 구체화

3. 무역구제제도 접근성 향상

-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확대 개편)** 센터의 신고대상과 역할 확대

구분	현행	개선
명칭	불공정무역행위 신고 센터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지원센터
신고대상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불공정무역행위, 덤핑·보조금
역할	불공정행위 감시·적발	감시·적발, 홍보·컨설팅 지원

- **(무역구제 산학연 포럼 정례화)** 무역구제 관련 산·학·연이 함께 소통하는 교류의 장 제공을 위해 산업연구원, KIEP 등과 연 2회 개최

4. 무역구제제도 인프라 개선

- **(조사역량 확충)** 전문성 확보, 조사의 연속성·조사기법 고도화 등을 위해 전문인력 채용 확대

- **(보조금 상계관세 조사기반 구축)** 보조금 조사 신청시, 즉시 조사 가능하도록 조사기법·조사질의서 등 실무규정 정비

- **기타 조사절차 및 운영 규정 정비**

- **(자료제출기한 명시)** 덤핑 등 당사자, 이해관계인에 대해 자료제출기한 기준 마련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증거수집방식 다양화)** 현행 제출서류를 근거로 조사하는 방식에서 관련자 진술조서·사실확인 서약서에 의한 조사방식 추가